

# 강진군, 5천억 추경 편성...중동발 '고유가 파고' 넘는다

### 중동 위기 극복·민생 안정 최우선 5천424억 예산안 논의회 제출 확정 농축어업인·영세 소상공인 등 보호

강진군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와 고물가로 직격탄을 맞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하며 선제적 위기 대응에 나섰다.  
22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중동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90억원을 포함한 총 5천424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강진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전남 개회한 제32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날 최종 확정됐다.

이번 '원포인트 추경'은 정부의 긴급 민생 안정 대책에 발맞추어 강진군 실정에 맞게 짜인 맞춤형 처방전이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보통교부세 24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66억원 등으로 마련됐으며, 최근

대의 악재로 직격탄을 맞은 데다 본격적인 영농철까지 겹친 농·축·어업인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동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집중 투입된다.

주요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고유가 파해 지원금 77억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긴급 한시 지원 1억5천만원 ▲조사료 제조용 비닐 인상분 지원 6천만원 등이다.

고유가 시대에 대응해 친환경 자동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도 8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해 선제적으로 요구 사항을

반영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유가 파해 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1차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으로, 지원 금액은 기초수급자 60만원, 차상위 및 한부모가정 50만원이며 전액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돼 가계 부담 완화는 물론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군은 비상 경제 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군의회

의 적극적인 공감대 아래 속도감 있게 심의를 진행했으며, 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집행해 군민들의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김준철 강진군 부군수는 "지금은 대외 악재로 인한 비상 경제 상황으로 행정의 최우선 과제는 군민의 생활 안정이 돼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즉각 대응해 마련한 이번 긴급 추경을 속도감 있게 투입해,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이 고통을 덜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 함평군, 학생 맞춤형 '치유 농촌체험' 운영

### 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 MOU

함평군은 지역 농촌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진로 탐색을 돕는 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2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함평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청, 함평체험관광연구회와 '학생 맞춤형 통합지역 연계 체험농장 운영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농촌 인프라를 교육과 연계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자 마련됐다. 3개 기관은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학생들의 관계 회복과 농업 직업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체험 프로그램은 센터가 육성한 함평체험관광연구회를 주축으로 운영되며, 반려동물, 도예, 전통음식, 딸기, 꽃차, 아열대 작물 등 다채로운 테마를 갖춘 6개 특화 농장이 참여해 학생들에게 내실 있는 현장 학습을 제공할 예정이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교육과 농업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폭넓은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체험농장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 영광군 "체험형 도시텃밭 가꾸세요"

### 30일까지 모집...15구획 추첨 선정

영광군이 도심 속 유휴농지를 활용해 군민들에게 친환경 안전 먹거리 수확과 정서적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텃밭' 시범운영에 나선다.

22일 영광군에 따르면 전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광군인 군민을 대상으로 총 15구획(구획당 12㎡) 규모의 체험형 도시텃밭 참여자를 모집한다.

분양 물량은 일반회원 9구획과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특별회원 6구획으로 나누어 배정된다.

참여 희망자는 군청 농업유통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을 거쳐 공정하게 선정되며, 다음 달 6일 군 누리집 공고 및 개별 문자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군민은 분양료 2만원을 납부하면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며, 도심 인근에 조성된 텃밭 공간에서 직접 작물을 재배하며 가족, 이웃 간 소통을 확대하는 생활 밀착형 농업을 체험하게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도시텃밭은 단순한 일회성 농사 체험을 넘어 군민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지역 공동체 회복을 돕는 핵심 사업"이라며 "이번 시범운영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도심 속 치유 농업 공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 '땅끝해남 반값여행' 최대 70% 파격 지원

### 오는 27일 접수...지역상품권 환급

해남군이 고물가 시대 관광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여행 비용의 절반 이상을 돌려주는 '땅끝해남 반값여행'을 본격 추진한다.

22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외지 관광객이 관내에서 결제한 금액의 50%를 모바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개인은 5만원, 2인 이상 팀은 10만원 이상 소비 시 신청 가능하며, 최대 환급액은 개인 10만원, 팀 20만원이다.

특히 만 19~39세 청년층은 환급률이 70% 상

향돼 팀 기준 최대 28만원의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을 위해서는 관내 관광지나 축제장 2곳 이상을 방문한 인증 사진이 필수이며, 인접 지자체(강진·영암·완도·진도) 거주자와 연 매출 30억원 초과 업소, 주유소 등에서의 결제 내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7일 오전 9시 1차 접수를 시작으로 여행 시기에 따라 총 3차례에 걸쳐 공식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조기 마감에 예상되는 만큼 사전 신청 일자를 꼭 확인해 서둘러 접수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 무안 선거구 사태, 민주당 '책임 회피' 논란

### 경선 후 선거구 변경 시민 혼선

### 전남도당·중앙당 책임 전가 지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및 무안군의원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경선 후 선거구 변경(본보 4월20일 9면)' 과정이 확산하고 있다.

뒤바뀐 절차로 인한 혼선을 넘어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대응과 책임 회피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전남도당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무안 지역 선거구 변경에 따른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만 반복

하고 있다.

앞서 전남도당위원장은 유권자가 40% 이상 변동될 경우 재경선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규정만 언급했을 뿐, 최종 판단은 공관위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더욱이 도당 사무처와 중앙당은 사태 해결을 위한 대응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타부서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 같은 당의 무책임한 대처에 예비후보들과 권리당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미 경선을 치른 예비후보들은 선거구 변경으로 기존 정치적 기반이 무너졌으며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권리당원들 역시 후보 선출권이 왜곡됐으며 절차적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

기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정당 민주주의의 핵심인 '당원 주권'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경선을 통해 후보로 확정된 예비후보들은 "선거구 변경으로 정치적 기반이 무너졌다"며 "사실상 선거를 다시 시작하는 수준이다"고 토로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결정을 미루는 방식으로 혼란만 더욱 가중될 뿐"이라며 "재경선 실시 여부를 포함해 당 차원의 조속하고 명확한 입장 표명과 수습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완도 신지명사심리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치유길 맨발 걷기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 모습.

(완도군 제공)

## 완도군, 웰니스 '치유 관광' 밀그림 착수

### 지역 상권 상생 연계 모델 발굴 등

완도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이범우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유 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제정된 '치유 관광산업 육성법'에 발맞춰 완도만의 독자적인 치유 관광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된다.

보고회에서는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치유 관광산업 지구 지정 및 우수 시설 인증 ▲국가 공모 사업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 ▲숙박·음

식 등 지역 상권과의 상생 연계 모델 발굴 등이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군은 향후 공청회를 열어 군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치유 관광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풍부한 해양·산림 자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치유 관광 도시의 청사진을 꼼꼼하게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 강성휘 "순천대 합의 위반...신속히 결정해야"

### 의대 신설 5항대로 결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강성휘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기존 대학 통합 합의서의 원칙적인 이행을 촉구하며 순천대학교의 최근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강성휘 예비후보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순천대가 제안한 이원화 교육체계와 동·서부 권역별 대학병원 설립 주장은 결정을 지연시키고 기존 합의를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판 흔들기"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 2024년 11월15일 양 대학이 체결한 대학통합 합의서를 강력한 근거로, "해당 합의서 5항에는 '요건을 갖춘 대학이 의

과대학 정원을 우선 배정받는다'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며 "지금 와서 이원화 모델이나 추가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사실상 합의를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순천대가 대안으로 제시한 이원화 교육 체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으며, 대학 간 협의가 어렵다는 핑계로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공백 속에서 고통받는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원화 구조 등은 장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일 뿐, 현 단계에서 의대 설립 결정을 늦추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30년 넘게 이어진 도민의 간절한 염원의 의대 신설은 속도와 실행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성휘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의과대학 관련 목표대 결정을 촉구했다.

(강성휘 목포시장 예비후보 제공)

이어 "더 이상 정치적 계산이나 지역 간 소모적인 힘겨루기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전혀 없다"며 "합의는 지키라고 있는 것이며, 전남 국립의과대학은 합의서 5항에 따라 원칙대로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